

조국 법무장관 입각설 여당내 엇갈린 시각

이낙연 총리 당 복귀 압박 분석...총선 '역할론' 유은혜·이게호 포함...김현미 장관은 유임 가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차기 법무부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면서 개각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둔 개각인 만큼, 이낙연 국무총리의 당 복귀 여부 등 여권 내 지형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26일 여권 핵심 관계자는 "9월 정기국회 전에 인사청문회를 끝내야 하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7월 말 8월 초에 개각을 하는 것이 상식적인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른 관계자도 "청문회 대상자가 많은 편이어서 일찍 시작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강하다"며 "조급 빨리 앞당겨야 한다는 것이 7월 말 정도"라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이 총리의 더불어민주당 복

귀가 압박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기에는 잠재적인 대권 주자로 각종 설문조사에서 여론 내 1위를 달리는 이 총리가 당의 간판으로 총선 선거운동에 나서주기 바라는 '역할론'이 깔려 있다. 민주당 입장에선 박근혜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낸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의 대비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이 총리가 당선 보장된 지역구에 출마하거나 비례대표 자리를 받고, 선거기간에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지원 유세에 집중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벌써부터 나온다. 다만 이 총리가 이번 개각 인사에는 포함되지 않고 정기국회 후 연말에 당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지배적인 관측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인기 좋은 이 총리가 이번 총선에서 역할을 해주기 바라고 있다"며 "지원 유세를 위해서라면 연말에 당으로 와도 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인지도 높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총선 차출론도 비슷한 맥락으로 해석된다. 서울 서초에 거주하는 강 장관을 '협지'인 서울 강남 지역에 내보낼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비례대표로 유세에 매진하도록 하는 방안이 더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번 개각에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이게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경우 유임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법무부장관 입각설과 관련해선 민주당 내 시각이 다소 엇갈린다. 우선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사법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온 조 수석에게 법무장관으로서 임무를 완수할 기회를 주는 것이라는 긍정적 평가가 주를 이룬다. 박상기 장관에 이어 교수 출신으로 법무부의 탈검찰화와 제도 개혁에 무게를 실을 수 있는 적임 인사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반면 '회전문 인사'로 보일 수 있는 점이나 한국당 등 야당의 거센 반발이 우려된다는 점에서 조 수석의 입각설을 탐탁지 않게 여기는 기류도 존재한다. 한편 조 수석이 입각할 경우 민주당이 내년 총선의 최대 승부처로 보고 있는 부산·경남(PK) 지역 선거 전략에도 일부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조 수석은 한때 부산 출마설이 제기됐으나, 본인이 주변 지인들에게 "그런 일은 절대 없다"고 거듭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임동욱 기자 tuim@연합뉴스

“유망서비스업 5년간 70조 정책금융 지원”

홍남기 부총리 경제활력회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유망서비스업을 대상으로 향후 5년간 7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26일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며 “우리 경제를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해 서비스산업 발전이 절실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서비스산업이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높고 일자리 창출 효과는 제조업의 두 배”라며 “부가가치와 일자리의 ‘보물창고’”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제조업과의 차별 해소, 기초 인프라 구축, 제조업과의 융복합, 거버

넌스 체계화가 필요하다는 구체적인 지원 계획을 밝혔다.

우선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차별 해소에 초점을 맞춰 재정·세제·금융 지원 혜택을 확대한다.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정부 서비스 연구개발(R&D)에 5년간 6조원을 투자하고 민간서비스 R&D 촉진을 위해 세제 혜택을 늘릴 계획이다.

관광·물류·보건·콘텐츠 등 유망 서비스산업별로도 지원책을 내겠다.

홍 부총리는 “한국을 찾는 관광객의 쇼핑 활성화를 위해 사후면세점 즉시 환급 한도를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하겠다”며 “화성 북항테마파크의 조속한 착공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광주시, 주택건설현장 지역업체 참여 확대

하도급참여율 통계 관리 우수업체 인센티브 부여

광주시는 민간주택건설사업 현장에 지역업체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한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600세대이상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시 지역업체가 70%이상 하도급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는 사항을 확대, 자치구에서 사업계획승인을 하는 600세대 미만 주택건설 사업 시행 시에도 지역업체 하도급을 권장한다.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위해 사업 착공 전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계획서 등을 제출받아 실적을 관리할 예정이다.

권장 하도급율 70%를 초과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향후 건축위원회 심의 시 입면적·입면차폐도 등의 완화규정을 적용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광주시 관계자는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민간주택건설업체와 지역건설업체의 상생협력을 통해 민간건설경기 활성화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 청문회 다음달 8일 개최 합의

배우자 재산 60억 형성 '송곳 검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내달 8일 실시한다.

여야 교섭단체 3당 법사위 간사들은 26일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런 내용의 인사청문회 실시 일정에 합의했다.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회동 직후 브리핑에서 “7월 1일 인사청문회 개최를 위한 전체회의를 열고, 8일 오전 10시에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3당 간 합의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송기현 의원은 “당초 7월 5일로 예정했던 것이 아니라”는 취지인 질문에 “(인사청문회 실시 안전을 의결하기 위한) 전체회의가 7월 1일 열리기 때문에 증인소환 절차 등을 고려해 8일 개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일 윤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인사청문회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윤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 등 가족의 재산으로 총 66억73만7000원을 신고했다. 본인의 재산은 2억401만9000원으로, 모두 예금이었으며 나머지 63억9671만8000원은 배우자 재산이었다. 인사청문회에서는 배우자가 60억원대 재산을 형성한 배경 등과 관련해 송곳 검증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무조사 기업 어려움 감안 할 것”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6일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기재위는 이날 6시간가량 이어진 인사청문회를 통해 김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 전문성 등을 검증한 뒤 적격 의견으로 보고서를 채택했다.

기재위는 보고서에서 “후보자가 국세청장 직분에 요구되는 전문성과 역량을 갖췄다는 의견이 있었고 고위공직자로서 임무를 수행하는 데 도덕성 측면에서 뚜렷한 문제점이 없어 보인다는 평가가 있었다”고 밝혔다. 다만 “기업에 압박하고 다른 정부 기관의 정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에서 부당하고 정치적인 세무조사가 이

뤄지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국세청장의 사정 당국 회의의 참가 등에 따른 국제 행정 외교 문제 등에 대한 인식과 개선 방안 등에 대한 후보자의 소신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기재위는 “후보자는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영세소상공인과 서민 등 납세자를 위한 적극적 세정지원 방안을 시행하고 재산은닉·편법증여 등에 엄격히 대응해 조세정의 실현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정치적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법과 원칙에 따른 투명하고 공정한 세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앞서 김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악의적 체납자에 강력하게 대응하고 내년부터는 일선 세무서에서도 체납자 조사에 나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 생활을 하는 고액 체납자는 국민에게 박탈감을 야기하고 있다”며 “지방정부의 체납추적담당팀을 통해 재산 은닉 추적을 강화하고 있으며 재산을 체납하는 면탈범은 형사고발하고 사해행위 취소 소송 등도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최근 사망설이 나온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은닉재산 추적에 대해 김 후보자는 “현재 은닉 재산을 계속 추적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그분들이 해외에 주로 있다”고 언급하고 “국내 재산을 철저히 환수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구직청년 교통비 지원 좋아요”

광주시, 1765명에 30만원 설문조사 결과 93% 만족

광주시가 올해 추진한 '2019 구직청년 교통비 지원사업'에 대한 청년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직청년 교통비 지원은 시가 구직청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2017년 도입한 사업이다. 올해는 청년 1765명에게 일시불 30만원이 충전된 대중교통 전용카드 '청년당당카드'를 지급했다.

광주시가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9일까지 사업 대상자 중 설문조사에 참여한 1613명을 대상으로 사업 만족도, 지원방법 변경 만족도, 취업에 도움 여부, 지원자격요건 등에 대해 설문조사

결과 93%가 사업의 필요성과 만족도에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

특히, 쿠폰 미충전액이 발생하고 쿠폰 충전을 위해 주기적으로 편의점 등을 방문해야 했던 각종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까지 월 6만원씩 5개월 간 나눠 온라인 쿠폰으로 지원해 주던 방식에서 올해 일시불 30만원 충전 교통카드 방식으로 변경된 방식에 대해서는 97%가 만족도를 나타냈다.

광주시 관계자는 “취업된 설문조사 의견을 수렴해 내년 사업 추진 시 모집 시기를 대학졸업시기에 맞춰 상·하반기로 나눠 선발할 계획이다”며 “교통카드의 사용범위 또한 현행 시내버스, 지하철에서 고속버스, 케이티엑스(KTX) 등의 확대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증입니다

● 매매대상 ●

- 개발행위 허가전 발전소
- 개발행위 허가중 발전소
- 현재 공사중인 발전소
- 현재 운영중인 발전소
- 1차 FIT 종료중 발전소
- 곤충사육장 + 태양광
- 버섯재배사 + 태양광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주)
전기공사업면허 광주 제00988호

상담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선로 걱정 마시고 전화주세요